

제214호 (2009. 7. 6)

■ 경제 동향

- 5월 국내건설 수주, 민간·공공 양극화 지속

■ 정책·경영

- ‘2009~13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쟁점 사항 분석
- 4대강 살리기사업의 권역별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정보 미당

- 중소 건설업체 경영성과 상대 비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스마트그리드’와 건설산업

5월 국내건설 수주, 민간·공공 양극화 지속

－ 공공부문 전년 동월 대비 71.9% 증가, 민간부문은 56.3% 감소 －

■ 공공부문은 토목과 주거용건축 수주 호조, 민간부문은 모든 공종에서 부진

- 5월 국내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어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6조 9,885억원을 기록함.
- 공공 부문의 경우 토목 수주가 SOC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그동안 부진했던 주거용 건축 수주도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71.9%가 증가한 4조 2,952억원을 기록함.
 - － 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01.1%가 증가한 3조 28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월비 755.9% 증가하여 역대 최대 증감률을 기록한 4월보다는 증가폭이 완화됨.
 - － 건축 수주는 비주거용건축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25.6% 감소하였으나, 그동안 지연돼오던 공공주택 물량의 발주로 주거용건축 수주가 호조(전년 동월비 61.1% 증가)를 보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전년 동월비 28.2% 증가함.
 - － 특히, 경기도의 김포한강 신도시와 광고 신도시 내에 공공 아파트 턴키 수주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함.

<2009년 5월 건설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토목	건축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9년 5월	6,988.5	4,295.2	3,028.0	1,262.9	2,572.6	188.5	2,379.0	3,285.9	3,693.1	2,470.1	1,223.0
증감률	-18.5	71.9	101.1	28.2	-56.3	-80.8	-51.4	26.0	-38.0	-26.9	-52.6
1~5월	31,804.2	18,928.7	14,497.6	4,418.7	11,887.5	1,940.0	9,922.2	16,959.4	14,806.7	9,046.0	5,760.7
증감률	-15.2	62.6	153.9	-25.1	-52.2	-31.9	-54.9	86.0	-47.8	-52.1	-39.1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의 경우 주거용건축 수주의 감소폭이 소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 수주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비주거용건축 수주도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56.3% 감소한 2조 5,726억원을 기록함.
 - －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6.3% 감소한 2조 3,790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 84.4%나 감소한 4월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완화됨.

- 주거용건축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46.0% 감소하여 4월의 88.6% 감소보다는 다소 침체폭이 완화되었는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일부 발생한 영향으로 보임.
- 토목 수주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년 동월 대비 80.8%가 감소하였는데, 올해 들어 침체폭이 가장 심각함.
- 뚜렷한 경기 회복 없이 비주거용 건축 수주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거용 건축 수주가 적체된 미분양주택과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폐지 기대에 따른 주택사업 연기로 부진이 계속돼 당분간 민간 수주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경인 아라뱃길 사업 영향으로 ‘치산치수’ 수주 크게 증가

- 토목 수주의 경우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수주가 4월보다 다소 완화된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치산치수’ 부문의 수주가 크게 증가함.
 -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25.5%와 21,858%가 증가한 도로와 철도 수주는 5월 들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호조세를 이어감.
 - ‘도로 및 교량’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60.5% 증가한 8,010억원을 수주하였으며, ‘철도 및 궤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94.7%가 증가한 6,925억원을 기록함.
 - 특히 ‘치산치수’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777.0%가 증가한 5,046억원을 수주하였는데, 지난 2008년 수주액이 4,4517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작년 연간 규모 이상의 수주를 기록
 - 이는 5월에 턴키·대안 공사로 발주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의 영향이며, 6월에 이어 10월에 ‘4대강 정비사업’ 물량이 발주되면 다시 수주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경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기타 공종을 제외한 세부공종들의 수주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치산 치수	발전 및 송전	토지 조성	기계 설치
2009.5	2470.1	445.8	396.0	190.1	191.1	801.0	692.5	504.6	165.0	259.4	348.1
증감률	-26.9	-66.0	-41.5	-64.9	275.9	160.5	94.7	1,777.0	-54.3	-44.6	-48.1
1~5월	9,046.0	2,074.0	1,207.8	1,721.4	757.6	6,474.5	3,555.6	720.7	699.9	1,663.3	2,123.6
증감률	-52.1	-57.3	-48.2	-7.6	84.6	196.9	481.0	359.2	-9.6	-25.7	21.6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2009~13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쟁점 사항 분석

■ ‘현 교통 SOC 스톡의 양적 수준’ 평가에 따라 SOC 재정 투자 방향 상이

- (SOC 스톡 부족) 우리나라의 SOC 스톡이 부족하여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SOC 스톡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1인당 GDP 2만 달러 시기에 국토계수가 유사한 주요국과 비교하면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도로 및 철도연장이 각 1.3~2.1배, 2.4~3.7배 높은 수준. IMD 경쟁력에서는 중위권 수준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SOC 스톡의 지속적인 확보 필요
- (SOC 스톡 충분) 우리나라는 평지 비율이 낮음에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외국과 단순 비교는 무리.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
 - 복지, 교육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 필요. 민간투자시장이 활성화된 경제 분야의 경우 재정지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음.

■ 철도 등 녹색성장 부문은 투자 확대, 도로 중심 투자는 현행대로 지속

- (철도 및 수자원 분야 투자 확대) SOC 부문 간 재원 배분 방향에 있어 도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고 철도 및 수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철도와 해운, 수자원 투자를 확대
- (도로 중심의 투자 지속) 우리나라는 국토 규모가 크지 않아 철도나 수자원, 해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도 이용 수요 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음.
 - 도로 재원이 축소되면 중장기 기간도로망 추진에 차질, 30대 선도프로젝트, 계속비 등 도로 부문에 고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을 축소하게 된다면 적기 완공 곤란

※ 현재 정부는 20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 SOC(수송교통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2009.6.23). 본 내용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SOC 투자 방향’에 대한 쟁점 사항을 재정리했고, 마지막에 필자의 의견을 간략히 제시함.

■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및 민간 및 공기업 투자 활성화 모색

-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에 예산이 확정되면 SOC 분야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어 기존 SOC 투자 규모는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음.
 -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투자 조정
 - 진행 중인 사업은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강화하여 투자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 사업성이 있고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SOC 사업은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BTO 등으로 우선 추진
 - 계속비 사업은 민간 시공사의 부담으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이상의 초과 시공이 가능토록 하여 SOC 사업 적기 완공 및 공사비 절감과 민원 해소 유도
- 토지은행(Land Bank)을 통하여 공공 사업 용지의 적기 공급 추진
- 수익성이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매칭 지속 추진
 -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사업의 성격 및 공기업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공기업 분담 비율 조정, 공사의 ABS 발행을 통한 자체 투자 등 활용

■ 2009년 수준의 SOC 예산 확보,

‘민간 투자 및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2010년도 SOC 예산에 4대강 사업 및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사업비가 포함되면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시설에 대한 예산 배정 축소 우려. 공기 지연 등 비효율 방지를 위해 SOC 예산의 무리한 축소는 지양되어야 함.
- SOC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지시 지급금 수준의 강화, 부대 사업 활성화, 기술 위주 평가 등 건설업계가 제시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민간 선투자시 인센티브 수준의 상향(국채 → 회사채)과 공기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민간 선투자 허용 필요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

4대강 살리기사업의 권역별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3조원이 증가한 16.9조원 규모의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 5.3조원을 더하여 총 22.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순수 건설공사비는 19.4조원에 이룸.
- 19.4조원의 건설공사비를 권역별로 추정하면, 수도권 1.6조원, 강원권 0.5조원, 충청권 2.9조원, 전라권 3.4조원, 경북권 6.4조원, 경남권 4.6조원임.¹⁾

■ 수도권 지역 : 생산유발 2.57조원, 취업유발 27.4천명

-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액 1.6조원은 수도권 내에 2.57조원, 전국적으로는 약 3.17조원의 생산을 유발
- 수도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27.4천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31.0천명의 취업 유발

■ 강원권 지역 : 생산유발 0.67조원, 취업유발 6.4천명

- 강원권 지역 건설공사액 0.5조원은 강원권 내에 0.67조원, 전국적으로는 약 0.99조원의 생산을 유발
- 강원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6.4천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8.7천명의 취업을 유발

■ 충청권 지역 : 생산유발 4.07조원, 취업유발 41.4천명

- 충청권 지역 건설공사액 2.9조원은 충청권 내에 4.07조원, 전국적으로는 약 5.78조원의 생산을 유발
- 충청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41.4천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53.3천명의 취업을 유발

■ 전라권 지역 : 생산유발 4.84조원, 취업유발 47.1천명

- 전라권 지역 건설공사액 3.4조원은 전라권 내에 4.84조원, 전국적으로는 약 6.7조원의 생산을 유발

* 본 분석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사용하나 적용 모형과 기본 자료가 전국 차원의 분석과 다르므로 전국적 파급효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1) 정부가 발표한 순 건설공사비를 권역별 사업 내용에 따라 배분하여 추정

- 전라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47.1천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60.9천명의 취업을 유발

■ 경북권 지역 : 생산유발 9.16조원, 취업유발 90.3천명

- 경북권 지역 건설공사액 6.4조원은 경북권 내에 9.16조원, 전국적으로는 약 12.68조원의 생산을 유발
- 경북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90.3천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116.6천명의 취업 유발

■ 경남권 지역 : 생산유발 6.80조원, 취업유발 69.6천명

- 경남권 지역 건설공사액 4.6조원은 경남권 내에 6.8조원, 전국적으로는 약 9.11조원의 생산을 유발
- 경남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69.6천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86.2천명의 취업을 유발

권역별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 조원, 천명)

구분	건설공사액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권역내	전국	권역내	전국
수도권	1.6	2.57	3.17	27.4	31.0
강원권	0.5	0.67	0.99	6.4	8.7
충청권	2.9	4.07	5.78	41.4	53.3
전라권	3.4	4.84	6.70	47.1	60.9
경북권	6.4	9.16	12.68	90.3	116.6
경남권	4.6	6.80	9.11	69.6	86.2

■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발생

- 권역별 4대강 살리기사업은 해당 권역 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물론 크지만, 기타 권역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업 물량 규모가 가장 큰 경북권 지역의 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윤영선(연구위원-ysyoon@cerik.re.kr)

중소 건설업체 경영성과 상대 비교

■ 건설업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

- 1990년에 517개였던 일반 중소건설업체²⁾ 수는 2002년 1만 개가 넘었고, 2007년 말을 기준으로 20배 이상이 늘어난 1만 943개 업체에 이르러 전체의 98.8%를 차지하는 한편, 고용의 64.3%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건설업의 기반 역할을 담당
 - 건설업 등록면허제도의 변화와 함께 중소건설업체가 급증하여 1990년 57.2%이던 중소건설업체의 비중은 2007년에는 41.6%p 증가한 98.8%를 기록
 - 2007년 일반 중소건설업체의 매출액은 31.2조원으로 전체 매출액 84.1조원의 37.0%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 이후 21.6%p 증가
 - 일반 중소건설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6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의 12.7%와 비교하여 약 5배 늘어난 수준
- 하지만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성과는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중소 건설업체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7
업 체 수	57.2	83.3	96.3	98.7	98.8
매 출 액	15.4	21.8	26.1	39.7	37.0
부가가치	15.9	25.9	36.2	43.6	40.2
종 사 자	12.7	31.3	51.2	58.1	64.3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연보

■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8억원으로 대기업의 0.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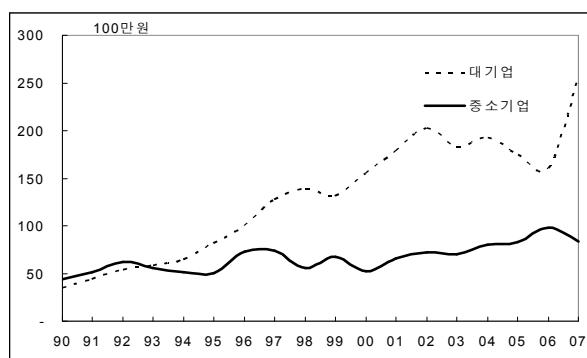
- 2007년도 대기업 평균 매출액은 3,984억원이고, 중소기업은 28억원으로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0.7% 수준에 불과
 -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50억~60억원 수준이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 30억원 수준으로 떨어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
 - 최근 10년 동안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연평균 9.1%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연평균 -6.1%로 큰 차이를 보임.
 - 건설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부실업체가 난립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업체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함.

2) 중소건설업체는 상시 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업체임.

■ 중소 건설업체 1인당 매출액, 대기업과의 격차 갈수록 확대

- 2007년 중소건설업체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8,4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2억 5,780만원과 비교하여 32.6%에 불과한 수준이며, 상대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1990년도 중소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4,410만원으로 대기업 평균 3,540만원보다 오히려 컸으나, 그 이후 대기업은 연평균 12.4%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3.9%에 그침.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



■ 수익성 역시 대기업에 비해 저조

- 수익성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능가하여 건설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6.9%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6%p 낮은 5.3%이며, 소기업은 5.6%를 기록
- 산업은행의 기업재무 분석에서도 2000년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평균 1.6%p의 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건설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외형적 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의 조성 및 기업 경영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수단 강구가 요긴할 것임.
-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건설업 등록규제 완화로 신생 부실 업체가 대거 등장한 것이 외견상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부실 업체가 온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합리적이지 못한 기업경영 관행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29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고용허가제 소수업종 기능테스트 등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회의에 참여 건설분야 외국인력 현지 선발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자문
7.1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제도 관련 자문회의에 이승우 연구위원 참여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방식 개선을 위한 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 자문
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조정원 전문가간담회에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를 위한 모델 개발과 관련한 자문 수행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건의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자문에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사항 중 관련 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한 재검토
7.3	대한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문회의에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보금자리주택 관련 통합 정보체계 구축의 방향성 검토 회의에 참여 자문

■ 대정부 정책 개선 건의 활동

- 허천 의원 주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 참여
 - 연구원은 7.1 국회 헌정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 이복남 건설관리연구실장이 주제발표
 - ‘최저가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주제로 선진국과 낙찰 프로세스의 비교, 국내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의 원인 진단, 낙찰 방식의 선진화(발주 및 사후관리 책임 일원화, 성과평가제 도입 등) 방안 제시

■ 기타 연구원 활동현황

- ‘건설보증연구팀’ 신설
 - 연구원은 7.1일자로 연구원 내에 ‘건설보증연구팀’을 신설. 팀장은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실장이 겸직
 - 이번에 신설된 ‘건설보증연구팀’은 향후 건설보증 분야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한 이론 연구와 함께 건설보증 관련 정책·제도 현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현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
- ‘실전 건설영어 과정’ 개설
 - 연구원은 7.14(화)에서 16(목)까지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에서 해외공사 및 미군발주공사 참여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실전 건설영어 과정’ 개설
 - 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교육팀(02-3441-0691)

‘스마트그리드’와 건설산업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융합기술로, 에너지 저감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우리 정부도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고 있다. 전력에너지 10% 저감이 기대되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며, 건설산업의 시장 참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스마트그리드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전력망이 아닌 수요기관·소비자망을 연결하는 통합망이 필요하다는 데서 탄생했다. 생산된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키 위해서는 소비처의 정확한 인지가 필수다. 소비자망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비처를 구성하는 인프라가 건설상품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도시 기후정상회의(C40) 중 캐나다에서 온 발표자가 토론토가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시(市)’가 될 것이라고 발표해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는 토론토시가 2050년까지 유해성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저감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하여 3대 실천 전략도 세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강제성을 띤 그린에너지법을 제정한다고 했다. 녹색도시의 정책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주창한 녹색뉴딜도 마찬가지다.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가스를 줄이자는 게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최근 ‘고 투 그린 빌딩(Go to Green Building)’의 슬로건 아래 1931년에 준공한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 성능 개선을 위해 향후 5년 간 5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능 개선의 핵심 역시 에너지 저감에 맞추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약 40% 저감시킨다는 목표다.

캐나다와 미국이 제시하는 스마트그리드의 구축은 공급과 수요를 연계시키는 망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급과 수요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기에너지 공급을 앞세우는 한국 정부와 차이가 있다. 한미 스마트그리드협력에서 시범사업으로 지목한 제주도의 녹색도시 혹은 마을 건설도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전략은 모두 완성 상품(도시와 항구, 교통 등)군별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일색으로 수요 저감 정책이나 투자를 찾기 어렵다.

녹색성장과 스마트그리드의 공통점은 에너지 손실 방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저감이다. 건설산업이 에너지 저감 부분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건설경제, 2009. 6. 18>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